

野 장동혁 “재선거 피할 수 없어 이재명 대통령 즉각적 회담 요구”

“출구조사 발표 이후 투표 지속
헌법 규정 자유선거 원칙 무너져
재선거, 국민 요구 수용하는 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재선거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재선거는 정당의 유불리에 따라 할거나 맡겨나를 결정할 단계는 지났다고 생각한다”며 “재선거를 하는 것이 이번 선거가 잘못됐고, 오염됐고,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정치가 인정하고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은 재선거를 원하는데 어물쩍 국정조사로 넘어가려 하거나, 여당 추천 특검으로 대충 뭉개고 가려 한다거나, 선관위 직원 100명 교체하는 것으로 끝내려 한다면 들불처럼 타오르는 국민의 이 분노를 절대 잠재울 수 없다. 이 분노를 피하려 한다면 이 분노가 결국 정치를 집어삼킬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번 벌어진 일련의 사태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출구조사 발표 이후 투표를 계속한 것만으로도 헌법이 규정한 자유선거의 원칙이 무너졌다”고 했다.

또 “투표 당일 투표용지를 이송한 것 자체가 심각한 불법 행위”라고 했다. 그는 “일련번호도 없는 투표용지에 손으로 번호를 적어넣었다. 이 또한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투표용지가 정말 내가

찍은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을 선관위가 자초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 정권은 개표 중지를 외치는 시민을 짓밟고 투표함을 강제로 꺼내갔다”라며 “도대체 뭐가 그리 급한지, 뭘 감추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즉각적인 회담을 요구한다. 직접 만나 시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대통령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래대 민주당 대표에게는 즉각적인 국정조사 특위 구성과 특검 출범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국회가 소임을 다해야 한다. 원 구성이 먼저라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이미 많은 국민은 이재명과 민주당과 선관위가 이번 사태를 부른 공범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사전투표도 없애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부정선거론자들의 주장이라 일축할 게 아니라 부정선거론의 싹을 자르면 된다”고 했다. 그는 “사전투표를 없애고 본투표 기간을 3일로 늘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與, 지선 국정조사 착수 선관위 전면 개혁 추진

한병도 대표, 오늘 요구서 제출
9명 위원 구성해 진상 규명
별도로 선거제도 개혁 TF 설치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긴급 회견을 열고 “내일(8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 의장계 신속한 본회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몫 국정조사 위원은 전반기 국회 행안위 간사를 지낸 윤건영 의원을 비롯해 이해식·김성희·모경중·임미애·양부남·이상식·이광희·채현일 의원 등 총 9명으로 꾸린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내일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즉각적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을러 “국정조사와 별도로 원내 선거제도 개혁 TF를 설치하고 공식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등 모든 관련 법률을 전

면적으로 다시 검토해 다시는 소쿠리 투표, 지퍼백 투표지 이송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으로 확실하게 연결하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을 향해 “재선거 요구 집회에 가서 청와대에 가자고 선동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민주당과 마주 앉아 즉각적인 국정조사와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라고 했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이 부여한 독립성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수호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기관”이라며 “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구조적 허점은 없었는지 전모와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선관위 개혁안을 마련해 국민 참정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선거관리 체계를 만들고 선거 과정에 대한 무너진 국민 신뢰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뉴시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하루 늦춘다

성일종 의원 연기 요청 수용
모바일 투표 허용 여부 주목

국민의힘이 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 일정을 당초 공고했던 9일에서 하루 늦춰 오는 10일 진행하기로 했다.

송언석 전 원내대표와 차기 원내대표 후보인 김도읍(4선·부산 강서)·성일종(3선·충남 서산시태안군)·정점식(3선·경남 통영시고성군) 의원은 7일 오후 국회에서 면담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선거관리위원회 회를 열어 9일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열어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결정하고, 6일 이같은 내용을 공고했다. 이에 대해 당 일각에서는 시일이 촉박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 당권파가 지지하고 있는 정 의원을 밀어주기 위한 속도전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성 의원은 공개적으로 연기를 요청하기도 했다.

성 의원은 면담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송언석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차기 원내대표 후보자들과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차기 원내대표 선거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도읍 의원, 송 전 원내대표, 성일종 의원, 정점식 의원. /뉴시스

“원내대표 선거 일정을 하루 늦춰 10일 오전 10시로 잡았다”며 “(면담에서) 이견은 없었고, 여러 일정을 보면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당초 오는 11일 또는 12일에 선출해달라고 요청했던 그는 “다들 일정들이 있으니 그런 부분을 양해했다”고 설명했다.

원내대표 선거 모바일 투표 허용 여부도 검토될 예정이다. 성 의원은 “당헌상

에서 원내대표(선거)에는 적용 안 했는데, 해외 출장 간 의원들도 모바일로 투표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라며 “이 부분은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 운영 지도부를 뽑는 것이니까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고 요청한 것”이라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김여정 “북한 핵보유국 지위, 불가역적”

(北 노동당 중앙위 총무부장)

미·중 정상회담 비핵화 합의설 부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총무 부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미·중 정상 회담에서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는 미측 주장을 부인하고,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절대 불퇴의 한계선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장은 담화를 통해 “5일 미 국무성 대변인은 자국 언론의 논평요청에 답변

하면서 지난달 중미수뇌회담에서 쌍방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비핵화라는 공동된 목표를 재확인하였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이는 미국의 상투적인 거짓정보류포놓음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노동신문이 7일 보도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 TR)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동의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완전한 날조이고 허황한 거짓정보”라며 “비핵화라는

고어에 대한 집착이 매우 특이하게 강한 미국관리들의 희망일 수는 있어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부장은 또 “우리는 그 누구와도 우리의 핵심 주권과 안전에 대하여, 가장 신성히 지켜져야 할 국가헌법에 대한 불손한 위헌 행위에 대하여 논의하지 않는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국지위를 후퇴하려는 미국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도 가지지 못하며 그 누구도 미국의 일방적인 수사성 발언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취임 1주년’ 李, 국정 운영 청사진 공개

국정 2년차 비전·2기 내각 구성
부동산 이슈 등 현안 직접 설명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오전 10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2년 차 비전과 2기 내각 구성, 부동산 이슈 등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7일 청와대에 따르면 기자회견의 슬로건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다. 세계가 주목하는,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과 의지를 함축했다.

키 비주얼(Key visual·핵심 장면)은 ‘빛, 길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구성된다. 청와대는 “‘빛’은 숭한 위기에도 국민이 지켜온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길’은 국가적 도전 앞에서, 필요하다면 없는 길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대한민국’은 우리나라의 도전이 전 세계의 표준과 모범이 되는 새로운 미래와 포부를 상징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념사를 통해 지난 1년의 소회를 밝히고, 2년 차 국정비전과 4대 목표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1주년 기자회견은 취임 후 네 번째 기자회견으로, 민생·경제와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3개 영역을 중심으로 질의 응답이 이뤄진다. 내외신 기자

16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회견에는 대학 언론 기자 출신 대학생 2명도 초청됐다. 정보현(이화여대 경제학과 4학년), 선우영현(인하대 기계공학과 4학년)씨가 청년 세대의 고민과 과제를 질문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회견에는 6·3 지방선거 이후 추진하기로 한 ‘조작기소 특검법’과 검찰의 보완수서권 폐지 여부를 다룰 형사소송법 개정 등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질문이 나올 전망이다.

지방선거 결과와 맞물려 국정 쇄신과 2기 내각 구성에 대한 질문도 예상된다. 이날 이 대통령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를 시작으로 일부 부처 장관들에 대한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대한 구상을 밝힐 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자주 언급하던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도 관심사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매물이 감소하고 전월세 가격의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어, 추가 공급 방안과 함께 보유세 등 세제 개편이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은 KTV와 유튜브 채널 ‘이재명 TV’를 통해 생중계된다.

/서예진 기자 syj@